

한국의 계급불평등과 계급정치의 구조: 공공성의 정치에 주는 시사점*

2 권 | 상지대학교

이 글은 한국에서 세계화 이후 사회경제구조의 변화가 사회집단들의 계급 의식과 계급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나타나는 사회의식의 특징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성격과 계급적 정치역량의 상태 같은 요인들의 작용에 의해 복잡한 비대칭성의 형태를 나타낸다. 한국의 사회집단들은 전체적으로 사회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계급적 불평등 현상을 점점 강하게 느끼고 있지만, 그것은 계급정치의 일면적 강화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다. 계급정치의 양상은 사회양극화의 패자인 하층계급에서 보다 오히려 상층계급에서 더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층계급의 하류의식은 계급의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중간계급 내지 노동계급 상층과의 경제적 분화 및 격차 심화로 인해 갈등적으로 표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하층계급은 상층계급의 정당과 가치관을 지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중간층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가치관도 진보적이지만 그 양태는 계급적 의식의 형태를 띠기보다는 탈계급적·탈물질주의적 의식의 형태를 상당 부분 띄고 있다. 이 같은 현상들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 시사점을 갖는다. 먼저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상층계급과 하층계급 사이에 불균형과 역비례성은 그들의 계급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 상층계급의 정치행태도 헤게모니적 지배능력의 발현이라기보다는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 속에嵌존하는 배제와 특권의 지속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시대적 지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계급정치를 합리화하는 것은 사회발전의 관점에서 일정정도 유의미하다. 그러나 세계화에 의한 사회경제구조의 변동은 기존 산업사회에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KRF-2008-358-B00007). 익명의 심사위원님들의 유익한 논평과 노고에 감사드린다.

서의 계급 범주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균열과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내는데, 그 같은 균열은 기존의 계급적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기보다는 여러 계급들을 교차하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바로 그 같은 변화들 속에서 사회세력들의 이해를 정치구도로 정립해 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새로운 공공성의 정치'라는 과제를 제시한다.

주제어: 계급정치, 세계화, 사회양극화, 공공성의 정치

I.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지난 수십 년간 세계화의 진행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급속하게 심화되어 왔다. 이 때문에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부상해 왔다. 한국에서도 지난 수십 년간 세계화의 영향으로 사회양극화라 불리는 현상이 빠르게 전개되어 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는 사회양극화를 향후 10년간에 걸쳐 예상되는 한국 사회의 4대 트렌드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데, 사회양극화 문제는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2009).

그런데 사회양극화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계급집단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치열하게 만들 수 있다. 한국에서도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계급(계층) 간 불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대되어왔다. 최근 한국 사회에 출몰하고 있는 주요 사회갈등 이슈를 살펴보면 감세, 삼불교육정책, 의료민영화 등 계급적 색채가 다분히 강한 이슈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회 추세를 반영하여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한국 사회에는 계급적 담론들이 출현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이를테면 '사회양극화', '20대 80의 사회', '88만원세대', '강부자', '부자감세', '부자증세'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회양극화와 계급적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그에 조응하는 계급적 이슈와 담론의 증가 현상은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회양극화의 심화는 계급적 정치균열 혹은 계급정치(class politics)의 강화로 나타날 것인가? 오래 전부터 서구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들과 실증적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계

급적 갈등을 증대시켜 새로운 계급균열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반대로 계급정치의 종언을 말하기도 하였다(Clark 2004, 43-44).

한국에서도 이 문제는 중요하다. 사회양극화 추세를 반영하는 계급정치라고 볼 수도 있는 정치현상들이 더러 눈에 띄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 및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강남지역의 유권자들이 계급적 응집력을 강렬하게 표출한 현상이나 이명박정부가 사회적 비판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감세, 부동산규제완화, 금산분리완화 등 부유층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프로그램 등을 거세게 밀어붙이면서 상층계급집단의 동원을 시도하는 현상들이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다.¹⁾ 또한 진보진영에서도 야당과 재야시민단체 등이 '민생민주국민회의'를 결성하여 계급적 이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나,²⁾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의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99%의 교육기본권을 묵살하고 1% 특권층을 위한 교육제도"라고 비판하는 것 등도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는 상반된 현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 '탈계급적' 사회현상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전통적인 정치경제적 갈등과는 별도로 소비주의, 생태주의, 다문화주의, 페미니즘 등 새로운 위험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사회갈등의 새로운 장 속에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결핍의 문제'를 넘어서 '정체성', '가치', '인정'의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정치지형의 측면에서도 제도정치, 대의정치, 계급정치, 권위정치, 욕망의 정치라는 기성의 흐름과 함께 생활정치, 참여정치, 위험정치, 인정정치, 가치의 정치라는 새로운 정치적 흐름이 출현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김호

1) 이명박 정부의 이런 일련의 정책프로그램은 "균열구조창출전략"(장덕진 2008), "정치적 지지층의 계급적 이해를 관철하려는 의도", "보수결집전략" 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2)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우리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학생 등 대중조직과 촛불운동을 이끈 누리꾼, 각 영역의 시민사회운동단체와 풀뿌리 주민조직,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언론인과 지식인, 문화예술인과 종교인, 시국을 걱정하는 각계인사와 제 정치세력, 한계 상황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서민대중 등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세력의 연대와 국민의 결집"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의 1% 특권층만을 위한 '강부자 정책'과 시장화 정책을 단호히 반대하며, 서민 살리기 정책, 공공성 확대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활동"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민생민주국민회의(준) 출범선언문, 2008. 10. 28).

기 2009). 2008년 촛불집회 사건은 그 같은 새로운 정치현상이 한국사회에 본격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제들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전개되는 논의는 아주 빈약한 편이다. 물론 지금까지 사회양극화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영향에 대해서는 무성한 논의들이 있었지만, 정치현상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한 경우는 없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계급적 이슈와 담론의 실체를 정치적 시각으로 좀 더 정밀하게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그것이 과연 계급정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계급적 불평등의 심화와 함께 계급정치의 저변을 형성하는 조건으로서 대중들의 계급의식이 증대되고 있는지, 사회경제구조의 양극화가 궁극적으로는 사회균열구조를 새롭게 창출하고 나아가서는 정당정치의 구조에 까지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문제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사회의 '공공성'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역사적으로 근대사회의 공공성은 계급정치의 출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그런데 지금은 근대사회의 사회경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공공성의 구조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경제구조와 계급정치의 변화를 통해 그것이 새로운 공공성의 정치를 어떻게 재구성해 나가고 있는지를 실천적으로 천착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새로운 위험사회의 출현과 관련된 문제들, 이를테면 사회양극화와 같은 문제들에 대응해 나가는 정책 대안에 대한 전략적 탐색도 가능해질 수 있다. 이 글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

1. 계급정치의 이론적 문제들과 선행연구 검토

'계급정치'(class politics)란 무엇인가? 계급정치는 계급적 사회균열구조를 핵심적 배경으로 하여 발생하는 정치이다. 클라크(Clark 2001)에 의하면, 계급정치란 정치가 사회계급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즉 사회계급의 정치적 중요성을 말하며 보통은 사회주의계열 정당, 노조 등 계급조직에 의한 노동계급정치를 말한다. 일

반적으로 계급정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직업적 균열에 의한 정치적 균열,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노조와 사회주의 정당, 노동과 생산중심의 정치적 이슈, 경제적 이슈의 우위, 이념적으로 분리된 정당과 유권자 등이다(김인춘 2006, 97).

역사적으로 사회균열구조가 계급적으로 첨예하게 발전하게 되는 동기는 근대적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전을 통해서였다. 마르크스는 계급, 근대성, 자본주의의 발전을 밀접하게 연관시켜 파악한 사람이었다. 그에 의하면 봉건사회의 해체와 기계 및 공장에 기반을 둔 산업경제로의 급속한 발전은 그 속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새로운 계급들의 존재를 공고하게 만들었다. 산업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자본주의적이라는 것이었으며, 자본주의는 기업가들에 의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자본의 소유자가 자유 시장에서 노동력의 판매자와 만날 때 성립하는데, 노동력의 판매자인 노동자는 생산수단(토지, 기계, 원료)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분리되고 배제된다. 이 두 개의 계급은 서로 의존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 축적구조의 착취적 본성으로 인해 내적으로 갈등적이다. 산업혁명이 급속한 추진력을 얻기 시작한 19세기 유럽사회는 이와 함께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적 관계 역시 동시에 첨예하게 발전해 간 시기였다. 마르크스(2008)에 의하면 공업의 발전은 자본주의에 내재된 착취의 메커니즘을 통해 점점 더 많은 무산 노동자를 양산해 낼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전체적으로 궁핍화시키게 되는데, 바로 이 착취에 대한 경험의 공유를 통해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에 대항하여 단결을 강화하게 된다. 처음에는 노동자 개인과 자본가 개인의 충돌이라는 형태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더 두 계급 간의 충돌이라는 성격을 띠며 발전해 나가게 된다.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에는 지주와 농민, 중간행정계급과 기술자 등 다양한 중간계급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힘에 의해 양극 분해되어 자본과 노동의 진영으로 재편되어 가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사회는 전반적으로 점점 더 양극화되어 가고 두 개의 계급으로 단결하여 투쟁을 벌이게 되며, 정치적으로도 이 같은 사회균열을 배경으로 한 정당들이 발생하고 편성되게 된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혁명적 계급투쟁 이론과 달리 서유럽의 정치는 노사 간의 역사적 타협에 기초한 사회민주주의적 계급정치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2차 대전 후 비약적으로 성장한 조직노동은 국가적 경제·사회정책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

함으로써 자본 및 정부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이루었다. 이념, 노조 등 계급을 정치세력화한 주체들은 정치적 행동과 이념적 호소로 계급적 이슈와 계급이익, 계급이념을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Hicks 1999; Western 1997; 김인춘 2006, 100). 립셋(Lipset 1981, 230)은 이 같은 정치모형이 의회민주주의가 확립된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럽정치의 지배적인 특징을 구성해 온 것으로 보면서 '민주적 계급투쟁'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 속에서 조직화의 권리는 시민권의 핵심적 요소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그것은 노동시장과 정치 양 영역에서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노동계급으로서의 형성을 의미했고, 이것은 다시 부르주아지의 대항조직화를 유발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일차적 특징을 계급사회로 만들었다. 그 결과 시민사회와 국가 사이에 펼쳐진 정치적 공간 역시 시민사회 내에서 민주적으로 경쟁하는 '민주적 계급투쟁'의 장으로 특징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김수진 2005, 65). 나아가 립셋과 로칸(1967)은 균열구조 이론의 관점에서 세계 각국의 정당정치, 특히 유럽의 정당정치를 비교 역사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계급정치의 이론모델을 제시했다. 이들은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발전한 근대 정당체제가 네 종류의 균열구조를 근간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균열구조가 점차 계급균열을 중심으로 단일화되었다는 명제를 제시하였다(성경룡 1994, 244). 즉 유럽에서 지금까지 정당정치를 규정해 온 가장 중요한 균열은 자본과 노동 간의 계급균열이었으며, 이러한 균열을 토대로 유럽 정당정치는 우파정당과 좌파정당 간의 경쟁으로 특징지어져 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노동-자본이라는 양대 계급을 축으로 하는 계급정치모델 이론이 근(현)대 사회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반대의 주장들 또한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일찍이 막스 베버는 중간계급, 점원에서 교사나 관리자에 이르는 다양한 집단의 화이트컬러, 즉 오늘날의 사회학자들이 신중간계급이라고 지칭하는 범주의 사회적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그에 의하면 현대 사회에서 관료제의 증대는 중간계급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킨다. 이 집단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들의 노동을 팔아 생활하므로 산업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무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높은 사회적 보상을 받고 프롤레타리아와 경쟁하는 위치에 자리한다. 베버는 이 신중간계급의 성장이 계급구조의 복잡성을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묘사한 혁명적 계급투

쟁은 봉쇄될 것이라고 보았다. 베버는 소유계급과 비소유계급의 구분선이 중요한 분리선임을 인정했지만 또한 이 집단들 내에서도 분리가 존재함을 매우 강조했다. 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에만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자체 내에서도 분리가 존재한다. 그의 이 같은 강조는 모든 계급들이 서로 경쟁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광범위한 계급집단들 내에서의 갈등이 계급 간 갈등만큼이나 크다는 견해를 낳았다. 그리하여 베버는 마르크스의 계급 양극화 모델보다 훨씬 더 많은 복잡성을 허용하는 계급모델을 만들어냈다(브래들리 2001, 285-287).

계급정치의 유효성에 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20세기 후반에 일어났다.³⁾ 20세기 후반 서구의 학계에서는 선진산업사회에서 정당체제의 기초로서 사회적 계급의 중요성에 관한 오랜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계열의 조류들을 대표하는 일군의 학자들은 사회적 불평등은 정치적 중요성을 상실했으며, 그에 따라 계급도 더 이상 중요한 현상이 아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계급정치는 지속적으로 재편되어 왔으며 인종, 성과 같은 새로운 정치 이슈들이 계급에 입각한 이해관계의 균열로부터 유래한 경제적 갈등을 대체해 왔다고 주장했다(Evans 1999, 1). 1960년대 이후 유럽정치는 계급균열이 현저히 쇠퇴하고 그 대신에 산업사회의 물질적·계급적 가치보다는 개인의 자율성, 정체성, 공동체 의식, 삶의 질 등에 기반을 둔 환경, 여성, 인권 등 비계급적 가치를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해 왔으며, 이에 따라 정당체제도 근본적 재편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Inglehart 1977, 1987; Flanagan and Dalton 1990).

하지만 계급정치의 중요성이 쇠퇴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런 논자들에 의하면, 성, 민족 등 새로운 불평등의 요인들이 부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급불평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스칸디나비아, 오스트리아, 영국과 같은 나라들에서의 다수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계급투표가 여전히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Weakliem 2001). 이들은 새로운 계급적 구도에 의한 정치의 재구성을 주장하기도 한다(Pakulski 2001). 이들은 포스트모던적 사회구조가 기존 계급정치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지만 노

3) 막스 베버는 합리화 과정으로서 근대적 사회구조의 복잡성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본 동시에 오늘날의 모더니즘(근대성)·포스트모더니즘(탈근대성) 논쟁을 미리 내다 본 가교역할을 수행하였다(터너 2005, 66).

동운동과 노동계급은 전략과 상황에 따라 재정립되고 재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에서 계급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규정된 계급구조 및 구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대표적으로는 홍두승(2005), 서관모(1987) 등의 연구가 그에 해당한다. 이 연구들은 계급구조의 객관적 변화가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의식과 정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하게 설명하기는 하지만 사회의식이나 정치행동을 직접 설명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는 계급의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조돈문(2006, 2008), 강수택(2003)의 연구 등이 그에 해당한다. 조돈문은 실증연구(2006)를 통해 “모든 계급이 보수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급이 상대적 진보성과 약한 보수화를 보임으로써 경미하나마 노동계급과 여타 계급들 사이에 이념적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 다른 논문(2008)에서는 노동계급 내부의 범주 간 이질성 유무에 주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규직의 보수화가 더 급격하게 전개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식수준이 역전”되었다고 진단한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사회의식의 변화 추이와 함께 정치의식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하지만, 측정 지표가 주로 정리해고나 민영화와 같은 경제적 이슈에 관련된 것들이어서 때로는 직업적 이익에 대한 도구적 태도와 구별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여러 계급들 간의 관계 속에서 계급정치의 양상을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 양태를 살펴보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셋째는 계급과 정치현상의 상관관계를 좀더 직접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국에서 정치현실이 계급정치이론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수준의 일반론적이고 피상적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는 달리 회귀하지만 선거결과분석을 통해 노동계급의 계급정치의 발현수준을 진단해 보려는 연구도 있다. 이종래(2003)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주요 선거결과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동자들의 계급투표행위가 선거를 거둬할수록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주로 조직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노동계급 전체로 과잉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논문은 바로 이 같은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특히 서구에서 계급정치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가 계급적 구도에 의한 정치의 재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폭넓은 스펙트럼에 입각

하고 있는 데 비해 계급정치에 관한 한국에서의 연구들은 협소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논문은 사회경제구조의 변동 요인과 그것이 계급관계의 경제적 균열에 어떻게 작용하고, 또 사회경제적 수준의 요인들이 여러 계급들 간의 정치적 역관계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계급정치의 지형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 이 글에서는 계급의 개념을 좀 넓게 사용하고자 한다. “계급과 계층을 명백히 다른 것으로 규정하는 배타적인 입장과는 달리 계급과 계층의 의미 있는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갈등적 계급관계가 비단 생산관계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자원이나 권력의 분배를 둘러싼 분배과정에서도 생겨나 중요한 사회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홍두승 1993, 30)는 관점을 따른다.⁴⁾ 특히 오늘날 현대 사회의 발전 양상은 사회적 분화와 다양성의 증가로 나아가고 있고, 그런 구조의 변화로 인해 계급관계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계급개념의 척도를 가지고서는 계급정치의 양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즉 현실의 불평등 구조와 갈등구조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사용하는 계급의 개념은 대체로 생산관계 속에서 사회적 위치뿐만 아니라 소득, 권력 등의 계층적 요인이 더해져 만들어진 차등적 성층으로서 상층-중간층-하층이라는 3분법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또 각 계급집단과 정치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글은 가급적 계급정치 전반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논문은 계급투표에 관한 지표들을 활용하고자 하였는데, 그 이유는 계

4) 계급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계급의 정치적 기능에 대한 논쟁들 속에는 계급의 개념에 대한 상이한 이해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계급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Clark 2004, 28-29). 첫째는 마르크스가 말하는 이른바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을 둘러싼 대립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범주를 의미하는 경우이다. 둘째, 마르크스의 계급개념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서 소유, 기술수준, 경영책임 등 다양한 직업적 조건을 기준으로 한 계급적 지위 유형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셋째, 가장 포괄적 개념으로서 차별적 불평등 현상 일체를 지칭하는 것인데, 여성이나 인종적 소수자 등도 계급을 구성하는 범주로 이해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계급론적 논의들은 첫 번째 개념을 포함하면서도 다양한 직업집단에 관련된 지위유형까지를 포함하여 계급집단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Dahrendorf 1959, 2004; Giddens 1980, 108-112; Wright 1985, 64-104).

급투표가 19세기 말 이래 사회계급이 역사적 중요성을 획득한 이후 계급의 정치적 중요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근거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김인춘 2006, 106).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막상 연구를 진행하다보면 계급별 투표행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의 부재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계급투표의 양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일부는 선거지표를 활용하고, 다른 부분은 여론조사 지지도 지표를 활용하면서 계급과 정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는 이 논문이 단편적 한계를 내포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2. 계급정치와 공공성의 정치

공공성이란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공동이익의 범위, 사회구성원들의 역할과 행동의 규칙, 제도를 지칭하는 것이다.⁵⁾ 공공성은 사적 영역의 상위에서 사회 각 요소 간의 특수성의 조화를 통해 일반성, 즉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질서, 규칙, 가치를 만들어 낸다. 공공성은 사회 제반 분야의 연결망이고, 각각의 분야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사회구성원들이 각기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입각한 채 공존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합의에 기초한다(정태욱 2002, 53).

그런데 공존의 영역은 공동선에 대한 일정한 도덕적 합의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초월적 진리가 아니라, 민주적 토론과 정치적 쟁투를 통해서 도출되는 것이다. 근대에서 공공성은 정치적 쟁투의 과정을 포함하는 정치적 상호소통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고,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역동성을 띤 '갈등적 타협'으로 나타나게 된다. 마키아벨리는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그 같은 사회적 역동성을

5) 흔히 공공성은 몇 가지 상이한 분석적 차원의 의미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첫째는 공개성, 개방, 여론 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사용되어진다. 이것은 유럽 중세시대 귀족과 성직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비밀스럽고 의식적인 정치질서를 세속화하고, 시민과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둘째는 형식적인 개방을 넘어서 '진실한(wahr)', '정의로운(gerecht)'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는 공적 질서, 공적 유용성, 공적 안정성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조한상, 2006: 73-74).

근대정치의 원리로 구성했는데, 그의 독특성은 정치가 갈등과 균열의 조직이며 그것이 인간사회를 타락시키지 않고 혁신하는 원동력이라고 보는 것에 있었다(안병진 2006, 90). 그는 그런 관점에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자유로운 정체가 되고 경제가 향상되고 영토가 확장된다고 보았다(임혁백 2008, 117).

그런 점에서 근대적 공공성은 계급정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형성되어왔다. 물론 계급적 균열을 통한 사회적 공공성의 구성은 로마의 공화정의 역사에서도 보이는 바이다. 즉 로마 공화정은 계급 간 갈등을 전제하며 계급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계급 간 권력공유를 지향하는 정체였다(임혁백 2008, 115).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 계급적 균열은 산업혁명의 물질적 변혁에 뒷받침되어 더욱 보편화되었다. 특히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조직화를 통해 사회구성원들 간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균형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었다. 바로 그 같은 공공성의 구조는 시민권(civil right)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제화되었는데, 이는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기초로 간주된다(Jacobson 1997; 최현 2008, 47 재인용). 즉 국민정체성의 형성과 시민권의 발달은 국가가 외국인과 자국민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대내적 평등성과 대외적 차별성을 동전의 양면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적인 사회구조의 변동은 공공성의 구조변동으로 이어진다. 정보통신 및 교통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흐름은 전 지구적 상호의존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구적 사회관계를 만들어 냈다. 그리하여 그 영향으로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주민이 인종적·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해지게 되었다. 더욱이 경제적·문화적 수준에서 지구적 교류의 전면화는 영토적 경계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던 국가적 통제 제도를 상당부분 무용화시킴으로써 국가와 시민, 정체성과 법적 권리가 분리되는 쪽으로 나아갔다. 이 같은 변화는 다문화 시민권 제도라는 대안이 제시되는 등 근대적 시민권 제도의 탈근대적 변형을 가져오고 있다(최현 2008, 51-53). 또한 대내적으로도 세계화의 작용은 사회경제구조를 변형시키고 있는데, 기존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계급적 균열구조가 해체되고 기존 계급·계층 내에서의 다양한 분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회균열이 만들어지고 있다.

바로 이상과 같은 사회적 구성의 변화와 사회균열구조의 재편은 공공성의 구조변동을 야기하고 있다. 세계화에 의해 기존 공공성이 해체되고 새롭게 공공성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의 공존 영역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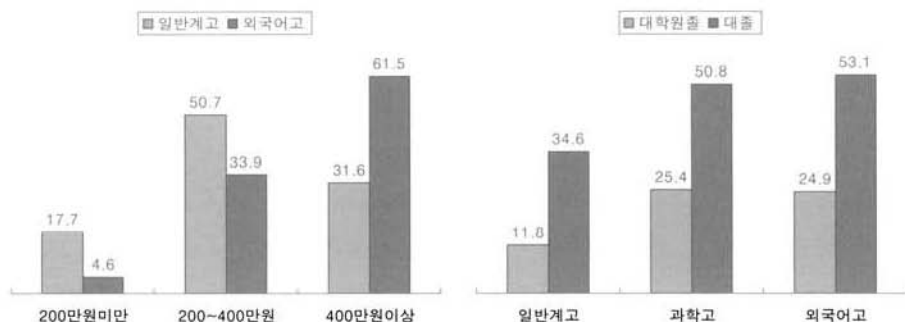
하기 위한 정치의 재편은 필연적이고, 사회 제 세력들의 헤게모니전략 또한 재구성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수준에서 이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계급정치의 변형이 공공성의 정치에 어떤 실천적 함의를 갖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III. 사회양극화의 심화와 계급적 귀속의식의 변화

한국은 1960년 초에서 90년대 중반에 이르는 고도 성장기에 경영·감독·전문가 층을 중심으로 한 신중단계급이 크게 성장하고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중산층 귀속의식을 갖고 있어 한국의 계층구조는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형을 지향해 왔다는 것이 대체적인 정설로 간주되어 왔다(김문조 2004, 31).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 파동을 전후로 해서 한국 사회는 세계화로 대변되는 물결이 대대적으로 유입되면서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에 한국 사회는 시장적 경쟁이 더욱 핵심해지는 현실 속에서 작업구조, 임금구조, 고용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몰려 왔으며, 이와 함께 사람들의 가치관에도 권위주의시대에 주입된 돌진적 낙관주의와 연공서열 같은 의사평등주의가 퇴조하고, 생존경쟁을 위한 치밀한 타산과 능력·실적을 중시하는 풍조가 급속히 확산되었다(송호근 2005, 188-193).

그런데 이 같은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동이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는 주장들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탈산업화나 정보화로 인한 고용축소, 세계화로 인한 경쟁강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노동운동의 약화 등 제반 요인으로 빈부격차가 꾸준히 확대되어 중산층이 축소 혹은 해체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다.

윤진호의 연구에 의하면, 임금이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층의 비중은 1999년 10.0%였는데, 2004년에는 12.6%로 늘었다. 또한 임금이 평균임금의 150% 이상인 고임금층 비중도 25.7%에서 27.8%로 늘어났다. 그런데 그 대신 중간계층 비중은 1999년의 64.3%에서 2004년에는 59.6%로 줄어들어 '중산층 약화' 현상을 드러내 왔다고 진단하고 있다(한겨레신문 2006/2/24).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도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1997년 이후 8년간 중산층의 비율은 5.3% 감소한 반면, 하위층은 3.7%, 상위층은 1.7%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보고



출처: 성기선 2008.

〈그림 1〉 고교별 가정 월평균 수입/부(父)의 학력

있는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6). 이런 추세는 최근 경기침체와 겹쳐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상위 20%는 가계수지 흑자규모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에 중간소득계층과 하위계층은 흑자폭이 둔화되거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⁶⁾

한편 이는 계급·계층 간 사회적 이동성 감소와 계급·계층구조의 경직화라는 현상을 낳고 있다. 계급·계층구조의 경직화 현상은 무엇보다 교육 영역에서 참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른바 ‘교육의 대물림’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성기선 교수(2008)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목고 학생들의 가정 소득과 학부모 학력이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그림 1). 이와 함께 한국 사회에는 계급·계층 간 공간분리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를테면 강남 대 비강남, 수도권 대 비수도권 등과 같이 거주생활공간에 따라 소득·자산 격차가 심화되어 갈 뿐만 아니라 학력, 주거환경, 소비수준 등 생활유형의 분화를 통해 사고, 가치, 행

6) 2008년 3/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의하면 전국가구의 상위 20%는 월 평균 721만원 5천 원을 벌고, 468만 1천원을 지출해 235만 1천원의 가계수지 흑자를 나타냈는데, 소득 21~40% 계층은 1년 전에 비해 3만 7천원 증가하는데 그쳤고 소득 41~60% 계층은 1년 전에 비해 4만 7천원 증가에 그쳤으며, 소득 61~80% 계층은 1년 전에 비해 7만 3천 원이 줄었고 소득 81~100% 계층은 무려 32만 2천원의 가계수지 적자를 나타냈다.

위, 의식세계를 통괄하는 문화격차를 야기함으로써 계급·계층 간 공간분리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양극화와 계급구조의 경직화 현상 속에서 한국인들의 주관적 계층의식 또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2000)에 따르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91년 61.3%, 94년 60.4%에서 99년 54.9%로 감소하였고, 반면 하류층이라고 믿는 사람은 91년 37.1%, 94년 38.2%에서 99년에는 44.0%로 증가하였다. 동아일보의 2007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7.9%는 자신을 '저소득층'으로 인식, 42.0%는 '중산층', 7.3%는 '빈민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동아일보 2007/3/31). 최근 중앙일보의 여론조사도 3년 전에 비해 핵심중산층의 비율은 축소되고 한계중산층의 비율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계층의식의 하향분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⁷⁾ 또 2008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국민의식조사에서도, 지난 10년간 국민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산층 귀속감이 1998년 41%에서 2008년 28% 수준으로 급속하게 하락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전 70~80% 수준에 비하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한국에서 세계화 이후 전개된 사회경제적 수준의 양극화 심화는 계급적 귀속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IV. 한국사회 계급정치의 전개와 변형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회경제구조와 사회의식에서의 변화들이

7)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은 2008년 12월 9일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880명에게 “당신은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물어봤다. 계층은 상·중·하층으로 나눈 뒤 각 층을 다시 3개(상층의 경우 상의 상, 상의 중, 상의 하)로 구분함으로써 9단계로 세분화했다. 조사 결과 상층 1%, 중층 57%, 하층 42%로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중층 대 하층 비율이 7대2로 나왔다. 핵심중산층(중의 상, 중의 중)과 한계중산층(중의 하, 하의 상)의 변화를 조사하였는데, 2005년 12월 조사와 비교하면 한계중산층의 비율은 27.8%에서 35.3%로 크게 늘고, 핵심중산층(중의 상, 중의 중)의 비율은 39.1%에서 36.3%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08/12/15).

사회집단들의 계급의식과 나아가서는 계급투표를 비롯한 계급정치현상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구조에서의 계급적 단절의 심화와 주관적 계층의식에서의 중산층의식 약화는 사회 전반의 계급적 갈등의 심화와 계급정치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경제적 수준에서는 사람들의 계급·계층적 귀속감이 중산층 의식에서 서민층(하층) 의식으로 바뀌는 추세가 발견되고는 있지만, 정치의식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계급적·진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또 이를 각각의 계급(계층)별로 분석해 보면, 그 양태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다. 사회경제구조의 변화가 그대로 계급정치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비대칭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계급정치의 강화 현상이 사회양극화로 인해 삶의 조건이 극히 불안정해진 하층계급이나 중간계급의 행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상층계급의 행태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같은 현상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단적인 경험 사례는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2008년 7월에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의 계급투표현상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상층계급이 가장 적극적으로 계급투표에 동원되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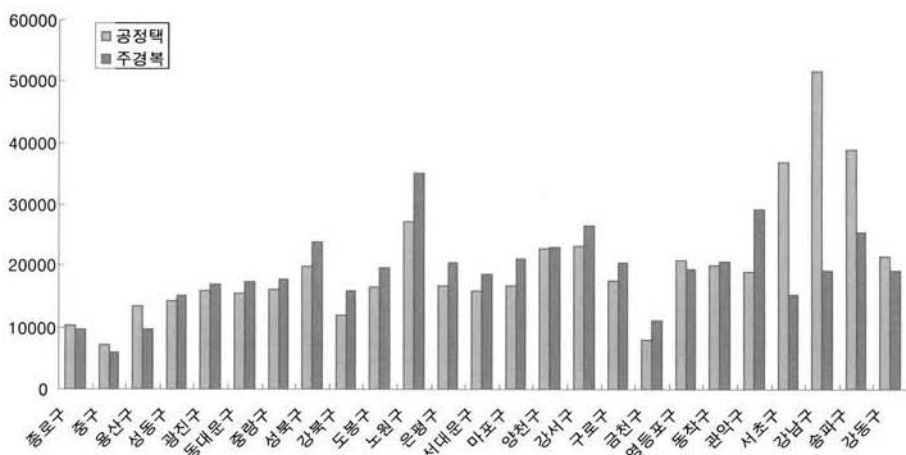
2008년 4월 19일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서울지역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방에서는 재산을 가장 많이 가진 상층계급집단이 재산증식과 재산보호를 위한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열성적으로 투표참여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아래 <표 1>은 상층계급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의 강남권 3개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상대적으로 하층계급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강북권 3

<표 1>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의 서울 강남권-강북권 비교

지역	보수정당지지	진보정당지지	지역	보수정당지지	진보정당지지
서울평균	55.5	40.8	서울평균	55.5	40.8
강북구	51.1	45.5	강남구	69.7	27.4
도봉구	54.9	41.9	서초구	67.2	29.5
노원구	53.5	42.8	송파구	59.6	37.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을 바탕으로 재구성

주: 보수정당=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진보정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출처: 오마이뉴스, 2008/7/31

중앙선관위 선거정보센터, <http://elecinfo.nec.go.kr/>

〈그림 2〉 서울시교육감선거 자치구별 득표 비교

개구를 대상으로 비례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명부투표에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에 어떻게 표를 던졌는지를 비교 분석해 본 것이다. 아래 표에서도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듯이, 상층계급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지역 강남권에서 보수정당으로의 표 쏠림이 강북권보다 훨씬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는 상층계급집단이 중간층 및 하층계급집단보다 계급투표에 보다 더 충실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또 2008년 7월 30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경우를 분석해 보면 상층계급의 계급투표현상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 선거에는 서울지역 전체 유권자 808만4천여 명 중 15.5%가 투표에 참여했다. 그 결과 보수성향의 공정택 후보가 40.1%의 표를 얻었고, 진보성향의 주경복 후보가 38.3%의 표를 얻었다. 그런데 지역별 득표율 구조를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공정택 후보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불과 8개 자치구에서만 앞섰고, 주경복 후보는 나머지 17개 자치구에서 앞섰다(그림 2). 그림에도 불구하고 공정택 후보가 최종적 결과에서 승리를 거둔 이유는 상층계급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이른바 강남 3개구에서 공정택 후보의 평균 득표율은 56.1%에 달한데 비해, 주경복 후보는 세 자치구에서 평균득표율이 불과 26.2%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공정택 후보의 승리 요인은 상층계

급이 강력한 응집력을 가지고 계급투표에 동원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상층계급의 계급투표 현상은 정권의 통치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명박 정권은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부유층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고, 금산분리 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비정규직법 완화와 최저임금제 개악 시도, 교육자율화정책 등 거대 기업과 일부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계급 편향적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상층계급의 정치동원을 통해 정치위기를 극복하려 한 시도로서 그 같은 계급동원전략의 구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상층계급의 계급투표 강화 현상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중간층 이하의 계급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상층계급의 투표행태와는 달리 계급투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서는 중간층의 계급적 투표와 관련된 행태를 볼 수 있는 직접적 데이터가 부재하기 때문에 몇 가지 정황적인 간접자료들을 통해 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양극화의 최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하층계급은 계급투표는커녕 오히려 계급배반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피앤시정책개발원이라는 민간조사기관이 2008년에 10월에 블란델-고스초크 모델에 의거하여 실시한 한국인의 정치성향 조사에 의하면, 소득별로 볼 때 200~400만원 사이의 중간층집단이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개혁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비해 200만원 이하의 소득집단으로 상대적으로 덜 진보·개혁적이며 더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⁸⁾ <표 2>에서 보듯이 소득이 낮을수록 사람들은 권위주의와 보수주의를 더 지지하고 진보·개혁주의를 덜 지지하는 경향을 뚜렷이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특징은 <표 3>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중앙대 차세대에너지안전연구단이 실시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⁹⁾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되는데, 그에 의

8) 상층, 중간층, 상층계급 사이의 소득구분을 200만원 이하, 200~400만원, 400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사실 400만원 이상의 소득자들도 상당부분은 중간계급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인용하는 이유는 조사 자료의 그 같은 한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추이를 살펴보는 데는 유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표 2〉 4분위 모델에 의거한 직업별·소득계층별 정치성향¹⁰⁾

	자유주의	보수주의	권위주의	진보·개혁주의	중도
전 체	5.9	8.8	33.2	37.3	14.9
101~200만원	6.2	8.8	37.3	35.4	12.3
201~300만원	4.8	5.3	34.9	42.0	13.0
301~400만원	2.7	7.7	28.6	49.9	11.1
401만원 이상	11.4	9.5	27.2	37.8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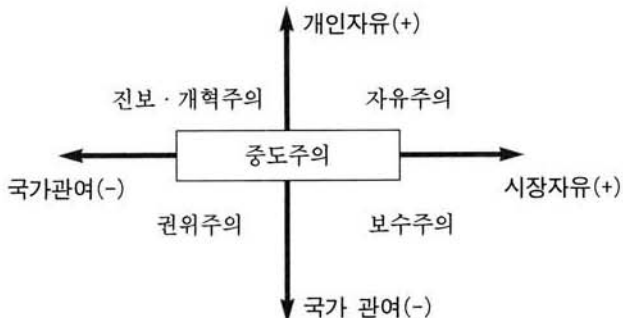
출처: 피앤시정책개발원, 2009, 『한국인 정치성향 조사결과 보고서』, 피앤시정책개발원.

하면 한국에서 하층계급은 상층계급과 마찬가지로 환경의식이 취약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용이 부족하며,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경제성장이나 안보를 위해 인권을 제한하는 데에 더 많이 찬성한다는 것이다(장덕진 2008). 바로 이런 점들은 하층계급이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대변하는 가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층계급의 가치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투표장에서도 진보적 정당보다는 보수적 정당에 표를 던질 것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중간계급은 앞서 언급한 조사들의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진보개혁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급적 지향성

9)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중앙대 차세대에너지안전연구단이 SBS와 중앙일보의 후원을 받아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이다. 조사기간은 2008년 8월 12~24일이며, 19세 이상 유효표본 1,002명, 지역별 인구비례 층화무작위 추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 3.1 퍼센트 포인트이다.

10) 4분위 정치성향의 기준은 블런델-고스초크 모델에 의거하여 도출된 것이다.



〈표 3〉 이념성향별 가치관 비교

항목	보수	중도	진보	p	설명
환경의식	77.0	79.3	82.7	.252	에너지 절약행동 참여한 적 있는 퍼센트
약자에 대한 관용	13.53	12.89	12.55	.007	에이즈나 한센병 등 질병 보유자와 악수 할 용의. 점수 높을수록 악수 기피. 4~20점.
사회적 위험 노출	10.9	6.3	8.0	.087	중간 이상의 사회적 위험군에 속한 퍼센 트
탈물질주의	물질주의자	혼합형	혼합형	.000	
인권의식 (경제)	2.90	3.01	3.03	.087	점수 높을수록 인권제한반대. 1~4점
인권의식 (안보)	2.72	2.88	2.91	.010	
정부불신	3.44	3.58	3.71	.002	점수 높을수록 불신. 1~5점
신문불신	2.99	3.08	3.02	.306	
방송불신	2.86	2.94	2.78	.077	
시민단체불신	3.04	3.00	2.75	.000	
촛불집회 참여	1.93	1.83	2.19	.000	촛불집회 참여정도. 1=촛불집회 부당 2=정당하지만 참여안함 3=소극적 참여 4=적극 참여

출처: 장덕진 2008, 52.

보다는 오히려 탈계급적 지향성을 더 많이 표출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중앙대 차세대에너지안전연구단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유권자들의 정치성향을 분석한 정덕진(2008, 52)의 주장에 의하면, 진보적인 집단일수록 환경의식이 강하고, 공익, 인권, 관용에 대한 의식이 강하며, 탈물질주의적이고 집합적 의사표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즉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중간계급은 물질적 가치나 계급적 가치보다는 개인의 정치사회적 자유나 인권, 공익, 환경과 같은 초계급적 가치들에서 보다 더 정치적 특성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표 3). 이는 한국에서 진보성과 계급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바로 2008년 촛불집회는 그러한 추세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촛불집회는 그 과정에서 운동 주체들이 노동운동을 비롯한 기층운동집단들과 일정하게 갈등을 빚은 데서도 보듯이 중간층운동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여기서는 한국 사회에서 핵심 이슈, 행위주체성, 문화적 가치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생명, 건강, 환경, 주거, 교육, 일자리와 같이 대중의 일상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탈계급적 생활정치 쟁점들이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부상하였다(고원 2008). 또 그 같은 변화와 함께 새로운 정치 주체가 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노동·민중, 지역 같은 기성집단들을 대체하여 여중생들과 고등학생들, 온라인 토론장의 네티즌들, 유모차 부대와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정치무대에 출현하였다(박승옥 2008).¹¹⁾ 바로 이 사건은 중간계급의 주체성을 매개로 진보성과 탈계급성이 결합되는 독특한 정치적 경로의 형성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요컨대 이처럼 한국 사회에는 사회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급속히 심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사회균열이 정치영역에서 계급정치의 강화로 연결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계급투표는 사회양극화의 피해자인 하층계급이나 중간계급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상층계급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하층계급은 자신의 계급적 가치를 지지하지 않고 역으로 상층계급의 가치를 지지하는 계급배반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크다. 중간계급은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것은 탈계급적 가치지향성을 강하게 띤다.

V. 계급정치의 변형 현상에 대한 추론적 분석

왜 한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진행이 계급정치의 강화로 나타나지 않는

11)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탈근대, 탈산업, 탈물질, 탈계급적 가치라는 변화의 방향과 전적으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헌법, 민주주의와 같은 시민적 기본권의 문제, 미국식 축산제도와 같은 자본운동의 문제, 헌정애국주의로 표출된 대외적 국가주권의 문제 등 근대적이고 국민국가 지향적인 가치들이 촛불집회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지속적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런 주체들이 표현되는 방식은 과거의 표현방식과 커다란 변모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원 2008).

〈표 4〉 한국 사회의 계급구성(단위: %)

계 급		1960		1970		1980		1990		2000	
중간계급	중상계급	20.5	0.9	30.3	1.3	40.3	1.8	45.6	1.9	53.0	4.3
	사무전문노동자 (화이트컬러) ¹²⁾		6.6		14.2		17.7		25.5		23.9
	자영업자		13.0		14.8		20.8		18.2		24.8
비중간 계급	육체노동자	8.9		16.9		22.6		30.6		29.7	
	도시영세민	6.6		8.0		5.9		6.2		7.6	
	농어민	64.0		44.7		31.3		17.5		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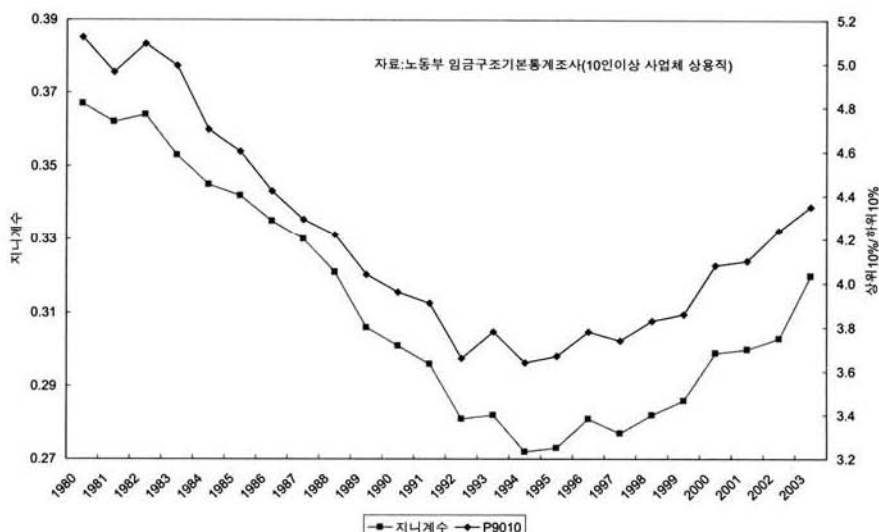
출처: 홍두승 2005, 67.

가? 계급과 정치의 관계 양태가 계급들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가? 여기서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추론적 수준의 분석을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우리는 그 원인을 사회경제적 조건의 특성으로부터 추론해 볼 수 있다. 역사적 맥락에서 한국의 계급·계층구조는 산업화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자본과 노동으로의 양극분해와는 사뭇 다른 패턴을 보여 왔다. 이런 특징적 추세는 1990년대 이후 더욱 급속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계화를 통해 국제경제 질서에 깊숙이 편입되면서 한국 사회는 근대적 산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와 탈산업사회가 중첩·공존하는 구조로 빠르게 변모해 왔다. 산업화를 통한 전통적 제조업 비중의 급속한 확장 추세가 정체되거나 쇠퇴하고, 대신에 지식·정보·서비스산업이 사회의 주력산업부문으로 그 비중이 점차 확장되어 왔다. 그에 따라 인구학적 구성에서도 산업사회를 상징하는 블루칼라 노동자계급의 비중이 축소되고 사무·전문·기술·관리 업종에 종사하는 화이트컬러 노동자 이른바 새로운 중간집단의 비중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표 4).¹³⁾ 바로 이 같은 계급구조의 특성은 산

12) 화이트칼라계층은 대체로 관리자, 전문가 상층의 중상계급을 제외한 (준)전문가, 기술공, 사무직종사자를 지칭한다.

13) 〈표 4〉에서 보듯이 사무전문노동자층의 비중은 2000년 현재 23.9%에 달하고 있다. IMF사태 직후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들이 집중적인 감원대상으로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약 6~7%가량이 자영업 부문에 은폐된 실업자로 인입된 점을 감안하면 2005년에



〈그림 3〉 임금소득 불평등도 추이

업화를 거치면서 형성된 서구사회의 계급적 균열 구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회균열구조 형성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간층계급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탈계급적 가치지향성은 이러한 사회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세계화 등 사회변동의 특성에 의한 영향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 세계화와 함께 나타나는 사회 불평등 구조는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본가계급-노동자계급으로의 단순한 이원적 양극화와는 다른 특수한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양극화 과정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회의 이원적 양극화의 경향을 보이면서도 각각의 계급·계층 내에서 세계화에 대한 연계의 유무와 지식·정보기술의 습득 여부에 따라 분화가 일어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자본 내에서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사이의 균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균열, 금융·IT 관련 기업과 제조기업 사이의 균열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중간계급 내에서도 전문직과 자영업 사이의 균열이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며, 노동계급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균열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계급 내부의 임금소득 불평등 추이를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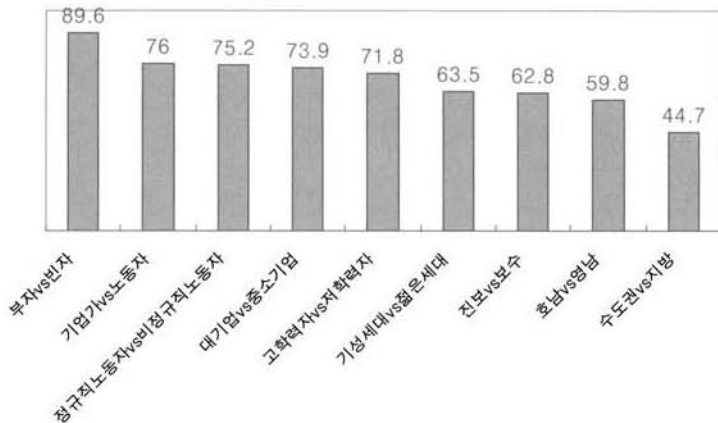
는 약 30%가량에 이르고, 2010년에는 35~4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계조사'를 기초로 살펴보면, <그림 3>에서 보듯이 지니계수는 1994년(0.272)을 저점으로 2003년(0.320)까지 증가하고, '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 (P9010)은 1994년(3.64배)을 저점으로 2003년(4.35배)까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는 조사대상이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이므로, 실제 임금소득 불평등은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은 2000년 4.94배, 2001년 5.19배, 2002년 5.50배, 2003년 5.60배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유선 2005).¹⁴⁾

이런 양상은 자본 내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규복의 연구(2009, 7-15)에 의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익성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볼 때, 대기업은 2001년에 6.03%였던 것이 2004년 9.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은 2000년 5.83%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4.15%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수익성 양극화는 고용 양극화, 기술개발 양극화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구조적 양극화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회적 양극화의 양상은 단순히 자본-노동, 빈-부로의 이원적 불평등의 심화가 아니라 각각의 계급들의 영역에서 다층적으로 진행되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사회적 균열의 특성은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이 2005년 8~9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균열 구조는 복잡하고 다층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4개의 갈등 그룹을 설정해 그룹마다 대칭되는 두 집단의 체감 거리감을 물어봤을 때, 측정 결과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간의 거리감(89.6%)이 가장 크게 나타난 가운데, 기업가와 노동자(76.0%), 정규직과 비정규직(75.2%), 대기업과 중소기업(73.9%) 간의 거리감 또한 그에 못지않게 크게 드러나고 있다(중앙일보 2005/10/13). 이는 빈부, 노사 간에만 사회적 거리감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노와

14) 이런 수치는 OECD 국가 중 임금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은 미국(2001년 4.33배)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매우+대체로 크다' 고 응답한 비율, 단위: %)

출처: 중앙일보 2005/10/13.

〈그림 4〉 집단 간 거리감

노, 사와 사 내부에도 균열이 있다는 것으로 사회균열의 복잡성과 다층성을 시사한다(그림 4).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세계화·정보화에 의한 사회변동 및 사회균열의 복잡성과 다층성은 사회집단들의 계급의식을 굴절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사회구성원들은 급격한 사회변동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현상을 이를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느끼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 집단마다 그에 대한 이해 방식과 태도는 판이하게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다. 막스 베버가 말한 것처럼 각 계급집단들 내부에서의 분화와 갈등이 계급 간 갈등을 상쇄함으로써 계급적 균열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남는 하나의 문제는 사회경제구조의 특성으로 앞서 설명한 계급적 균열의 양상을 전부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탈근대사회로의 빠른 진입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응이 왜 각 계급들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특히 상층계급은 중간층계급과 달리 왜 강한 계급정치적 행태를 보이고, 하층계급은 계급배반적 행태를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상층계급의 계급정치적 행태는 한국 자본주의에 지속적으로 온존되고 있는 전근대성과 천민성의 요소에 의한 근대성의 왜곡된 실현 때문에 생겨나는 '시

대적 지체' 현상이라고 보인다. 그것은 독일의 마르크스주의 사학자인 블로흐(Ernst Bloch)가 말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simultaneity of the non-simultaneous)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세계화·탈산업화·탈근대화 같은 새로운 사회현상들이 급속하게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과거의 사회문화적 구조 사이의 괴리 및 그 괴리로 인해 빚어지는 '문화적 지체(cultural lag)'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하층계급의 행태는 '조직화된 정치적 경험'의 유무에 대한 역사적 설명 요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톰슨(1968)에 따르면 "계급은 어떤 사람들이 공통된 경험의 결과 자신들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다른 타인들과 대립되는 동일한 이해관계가 존재함을 느끼게 되고 또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 나타난다."고 말한다. 작업장과 주거공간에서 반복적이고 집단적인 경험을 공유하게 될 때 단일한 정치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Parkin 1979; Giddens 1973, 1984; 은수미 2009, 40 재인용). 또 자신을 대변하는 정당, 조합 같은 조직의 유무와 그것을 통한 집단적 정치경험과 교육의 수행 여부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국에서 사회의 하층계급을 구성하는 집단들은 반복적이고 집단적 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과 진보적 계급정당의 부재는 하층계급이 정치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구조적으로 제약해 왔다. 더욱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노조가입률이 3.4%에 지나지 않고,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는 직업적 특성상 집단적 조직화의 가능성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하층으로 갈수록 집단적 경험의 가능성을 더욱 제약받게 된다. 게다가 이들은 언론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사회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 계급정당 및 지지기반의 부재는 하층계급을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동원한 역사적 경험이 부재하다는 것과 일치한다.¹⁵⁾ 바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현실적 조건들이 결합하여 한국 사회에서 계급적 정치균열을 특수하게 나타나도록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다.

15) 이와 관련해서는 은수미(2009)의 논의를 많이 참조하였음.

VI. 요약과 합의: 계급정치, 탈계급정치, 공공성의 정치

지금까지 본론의 논의를 요약하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의식의 특징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성격과 계급적 정치역량의 상태 같은 요인들의 작용에 의해 복잡한 비대칭성의 형태로 나타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사회집단들은 전체적으로 사회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계급적 불평등 현상을 점점 강하게 느끼고 있지만, 그것의 양태는 여러 가지로 굴절되고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다. 계급정치의 양상은 사회양극화의 패자인 하층계급에서보다 오히려 상층계급에서 더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층계급의 하류의식은 계급의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중간계급 내지 노동계급 상층과의 경제적 분화와 격차 심화로 인해 갈등적으로 표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하층계급은 상층계급의 정치적 헤게모니에 포섭되어 상층계급의 가치관을 지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중간층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가치관도 진보적이지만 그 양태는 계급적 의식의 형태를 띠기보다는 탈계급적·탈물질주의적 의식의 형태를 상당 부분 띠고 있다. 계급적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계급적 귀속의식이 강화되기도 하고, 그런 추세를 반영하여 계급담론이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계급정치의 강화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기존 이론의 이분법적 도식에 의해 단면적으로 설명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현상으로서 우리에게 한국 사회의 이행적 특수성을 포착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¹⁶⁾

바로 이와 같이 계급적 정치현상과 탈계급적 정치현상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은

-
- 16) 이와 같은 새로운 이슈 및 가치 유형이나 행위주체성의 출현은 세계화·정보화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구조 변동의 특성과 관련된다. 김문조(2008, 99-100)에 의하면 오늘날 현대사회는 특정 가치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제도들 간의 경계가 이완되는 '사회구조적 유연화'와 '사회가치의 다원화'를 초래함으로써 변화의 복잡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내적 구조나 동학이 복잡다단하여 일률적 진단 예측을 어렵게 한다. 이 같은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성은 새로운 사회갈등유형을 산출하는데, 현대적 갈등에는 권력이나 재화와 같은 정치경제적 요소는 물론이고 소비주의, 페미니즘, 다문화주의 등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접착된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욕구들이 가세된 사회갈등은 단순히 '결핍의 문제'를 넘어서 '의미'의 문제를 파생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정치세력들의 공공성의 정치전략(헤게모니전략) 수립에 중요한 함의를 던져 준다. 한국 사회에는 앞서 말한 사회현상의 모순적 조건들과 마찬가지로 계급정치적 지향성을 갖는 사회정치세력과 탈계급정치적 지향성을 갖는 사회정치세력들이 병존하면서 다양한 수준의 갈등-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학계에서도 계급정치와 탈계급적 정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정치주체의 형성 방법과 정책의제의 설정에서 계급정치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장(김인춘 2006; 김영수 2004)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계급보다는 탈계급적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최현 2008)이 있고, 또 이를 절충하려는 주장(조희연 2008)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먼저 계급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상층계급과 하층계급 사이에 불균형과 역비례성, 특히 하층계급에서 보이는 계급배반적 양태는 그들이 좀 더 계급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 또 상층계급의 정치행태도 실질적으로는 시대적 지체를 반영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기 힘들다. 상층계급의 정치행태는 헤게모니적 지배능력의 발현이라기보다는 한국 자본주의 구조 속에 엄존하는 배제와 특권의 온존, 즉 천민적 속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계급정치를 합리화하는 것은 사회발전의 관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인 계급정치적 노선은 세계화와 탈산업화와 같은 사회경제구조의 변동에 의해 새롭게 재구성되어지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에서는 기존 산업사회에서의 계급 범주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균열과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내는데, 그 같은 균열은 기존의 계급적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기 보다는 여러 계급들을 교차하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이슈의 양상에서도 새로운 사회변동 요인들의 작용에 의한 위험사회의 쟁점들이 출현하여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획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자리, 건강, 교육, 육아, 환경 등 계급적 다양성을 포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변화들은 어느 사회정치세력도 기존의 계급적 균열에 일면적으로 의존하는 정치 전략을 추구할 경우 궁극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파적 보수 세력들이 추구하는 상층 자본계급 중심의 계급정치 전략이나 좌파적 진보정치세력이 추구하는 노동계급 중심의 계급 정당전략은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근래 한국의 노동운동 진영이

과거 계급적 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으로부터 '사회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 전화해 가고 있는 것도 기존 계급정치적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오건호 2007). 따라서 앞으로 정치 전략은 계급을 교차하며 등장하는 사회 의제들 속에서 각자의 이해를 정치구도로 정립해 내고, 그것을 통해서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새로운 공공성의 정치'에 대한 과제를 안게 된다.

투고일 2009년 8월 19일

심사일 2009년 9월 1일

게재확정일 2009년 9월 14일

참고문헌

- 동아일보. 2007년 3월 31일.
 오마이뉴스. 2008년 7월 31일.
 중앙일보. 2005년 10월 13일, 2008년 12월 15일.
 한겨레신문. 2006년 2월 24일.
 강수택. 2003.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자 사회의식의 변화." 『경제와 사회』 통권 58호.
 고원. 2008. "촛불집회와 정당정치개혁의 모색." 『한국정치연구』 제17집 2호.
 김문조. 2004. "정보화와 한국사회 불평등체계의 변화." 『담론201』 vol. 7 no. 1 통권 16호.
 김수진. 2005. 『민주주의와 계급정치: 서유럽 정치와 정치경제의 역사적 전개』. 백산서당.
 김영수. 2004. "공공성의 계급적 성격과 사회적 관계." 『사회과학연구』 제22집.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유선. 2005. "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노동시장 양극화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의원 김영주 정책토론회 자료집.
 김인춘. 2006. "계급정치와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경제와 사회』 통권 제72호.
 김호기. 2009. "한국정치의 현실과 과제: 민주화와 세계화 사이에서." 미래정책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

- 박기덕, 2006. “한국정치의 갈등 분석과 해소방안 모색: 지역, 계층 및 이념 갈등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 1호.
- 박승옥, 2008. “촛불, 민주주의, 석유문명.” 『프레시안』 2008. 7. 18.
- 브라이언 S. 터너, 2005. 최우영 옮김, 『막스 베버,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역사사회학』. 백산서당.
- 서관모, 1987. “한국 사회 계급구성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성경룡, 1994. “국민국가 장래와 정당정치의 향방.” 김재한 편, 1994. 『정당구도론』. 나남.
- 성기선, 2008. “누가 특목고에 진학 하는가.” <고교평준화와 고교 간 격차>. 대화문화 아카데미 세미나 자료집.
- 송호근, 2005. 『한국,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21세기북스.
- 오건호, 2007. “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활동에 대한 평가와 제안: 요구에서 참여로.” 『시민과 세계』. 참여사회.
- 은수미, 2009. “비정규근로경험과 정치행위.” 『동향과 분석』 제133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이규복, 2009. 『대·중소기업간 수익성 양극화와 경제성장: 기업간 협상력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 이종래, 2003. “노동자집단의 투표행위와 계급정체성.” 『경제와 사회』 통권 제58호.
- 임혁백, 2008. “공공성의 정치학적 접근.” 윤수재 외 편저, 2008.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법문사.
- 장덕진, 2008. “한국의 보수. 그들은 누구인가?” 『보수를 말한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심포지엄자료집.
- 정태욱, 2002. 『정치와 법치』. 책세상.
- 조돈문, 2006. “노동계급의 계급의식과 보수화의 이론과 쟁점.” 『경제와 사회』 통권 제72호.
- 조돈문, 2008.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경험과 노동계급 계급의식.” 『경제와 사회』 통권 제79호.
- 조한상, 2006. 「시민사회와 공공성: 시민사회에 관한 헌법이론적 고찰」,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조희연, 2008. “신자유주의적 불평등, 신보수정권 시대의 ‘복합적 반신자유주의 정치’: 새로운 보수체제의 성격과 대응실천에 대한 급진민주주의적 시각.” 『진보평론』 제36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18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현. 2008. "탈근대적 시민권제도와 초국민적 정치공동체의 모색." 『경제와 사회』 통권 제79호.
- 칼 마르크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2008. 강유원 옮김. 『공산당선언』. 이론과 실천.
- 해리엇 브래들리. 2001. "변화하는 사회구조: 계급과 성." 스튜어트 홀 외. 전효관 외 역. 『현대성과 현대문화』. 현실문화연구.
- 통계청. 2009.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2009. 1. 20. 통계청.
- 피앤시정책개발원. 2009. 『한국인 정치성향 조사결과 보고서』. 피앤시정책개발원.
- 홍두승 · 구해근. 1993. 『사회계층 · 계급론』. 다산출판사.
- 홍두승. 2005.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학교출판부.
- Bloch, Ernst. 1991. *Heritage of Our Time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lark, Terry Nichols. 2001. "The Breakdown of Class Politics." in S. M. Lipset. and I. L. Horowitz ed. *Civil Society and Class Politics*.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 Dahrendorf, Ralf. 1959.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Evans, Geoffrey. 1999. *The End of Class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lanagan, S.C. and R.J. Dalton. 1990. "Models of Change." in P. Maier eds. *The West European Party Syste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iddens, Anthony. 1980. *The Class Structure of the Advanced Societies*. London: Hutchinson.
- Hicks, Alexander. 1999. *Social Democracy and Welfare Capitalism: A Century of Income Security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1987. "From Class-based Politics to Value-base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
- Lipset, Seymour Martin. 1981.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ipset, Seymore Martin and Stein Rokkan. 1967.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New York: Mcmillan.
- Pakulski, Jan. 2001. "Class Paradigm and Politics." in Clark. Terry Nichols and S.M. Lipset. *The Breakdown of Class Politics: A Debate on Post-Industrial Stratification*. Baltimore &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Thompson, E.P. 1968.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Harmondsworth: Penguin.
- Weber, Max. 1968. *Economy and Society*. Vol. 1. edited b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New York: Bedminster Press.
- Western, Bruce. 1997. *Between Class and Market: Postwar Unionization in the Capitalist Democrac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eakliem, David. 2001. "Social Class and Voting: The Case against Decline." in Clark. Terry Nichols and S.M. Lipset. *The Breakdown of Class Politics: A Debate on Post-Industrial Stratification*. Baltimore &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Wright, Erik Olin. 1985. *Classes*. London: Verso.

ABSTRACT ■ ■ ■

Class Polarization and Structure of Class Politics in Korea: The Implication on New Politics for Publicness

One Koh | Sangji University

This paper analyses how the socio-economic changes in Korea after globalization influence the class consciousness of social groups and class politics. Though people in Korea tend to feel the class polarization more acutely, interestingly enough, they don't develop class politics accordingly. There are distinct variations among the classes. The phenomenon of class voting is noticeable at the upper class. On the contrary, the lower class incline to support the value agenda of upper class and therefore vote for the conservative party. Middle class appear to be more liberal, although their value appeals demonstrate post-materialistic and non-class pattern. The unsymmetric pattern seems to represent the underdevelopment of class consciousness at lower class level. It implies that class politics in Korea needs to be more rationalized for more balanced social development. The socio-economic changes driven by globalization, which have emerged new social cleavages and issues, ask us to be more attentive to the "new politics for publicness."

Keywords: globalization, the class polarization, class politics, new politics for publicness